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대회 발제문
 Konferenz zur friedlichen Wiedervereinigung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m Gedenken an die großen Erweckungsbewegung in Pyongyang vor 100 Jahren.

<주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안보과제와 교회의 역할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제를 중심으로 -

Die Sicherheitsaufgabe und die Rolle der Kirchen für das
 Friedenssystem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 Im Hinblick auf die Aufgabe einer Umwandlung des
 Waffenstillstandabkommens zu einem Friedensvertrag -

양영식

YANG Young-Shik (Former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고려대 북한학과 객원교수·민주평통기획특별위원장·前 통일부 차관)

(Gastprofessor für den Fachbereich Nordkorea an der Korea-Universität.

Vorsitzender in der Projektkommission im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ehemaliger Vizeminister für Wiedervereinigung)

I. 머리말

평양대부흥 100주년의 해에 즈음하여 불안한 휴전54년만에 군사
 분계선(MDL)의 빙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나고 있다.

북핵실험 강행으로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가 양자접촉과 BDA문제의 해결에
 힘입어 ‘비둘기 게임’으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됨 에 따라 6자회담이 날개를 달게 되었다.
 행동대행동 원칙과 단계적 해결 원칙의 합의 그리고 ‘2.13’ 초기 이행조치의 본격가동은
 “줄 것 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라는 이른바 일괄타결(Big Deal)의 협 상 타결이
 빛을 발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생존권 보장대 비핵화(CVID)의 실현은 북한 핵 불 능화 단계와 완전한
 핵폐기(핵무기 포함)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서 장기간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북·미합의는 국가적 운명과 명예를 건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필경 성공의
 열매를 맺을 전망이다.

이제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실행이 본격화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반도 종전선언 제의(2006.11.)가 호응을 얻게 되면,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 하여 직접

당사국들(남·북한·미·중국)의 별도 포럼을 구성하기로 합의 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주요 현안 과제로 다룰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미·북 관계 개선 추이와 6자 회담의 진전은 감사한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냉전의 추운 겨울에 한국교회가 세계에 선 포한 이른 바 ‘88선언’(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잠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먼저 적대감과 증오, 대결과 갈등 속에 평화·화해의 사도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죄책을 고백·회개하면서, 남북의 화해·공존과 평화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에 헌신할 것을 다짐 하였다.

특히,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하루속히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한·미·중국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협상의 조속개최”를 촉구하였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핵무기 불사용 및 철거 등 한반도의 완전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세계교회들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88선언’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이 냉전이 그 위용을 떨치던 시점이 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휴전선의 빙벽 깨기에 나선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박종화, “88선언과 한반도 평화정착”, KNCC 평화통일정책 협의회, 2007.5.3)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며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예비하신 가운데 교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의 빙벽을 허무는 일은 중이나 망치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공존의 햇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함을 주님은 한국교회를 통해 깨우쳐주시고 있음이다.

‘88선언’이 발표된 지 3년 후 남북한 정부가 ‘남북기본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의 제5조에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계속 불안한 휴전 체제를 유지해 왔을 뿐, 남북 사이에 실질적 협상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평양대부흥 100주년의 해에 미국이 남·북한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나설 것을 결단하고 ‘중·미·북·한선언’을 제안한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의 빙벽 허물기 작업의 출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II.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

민족의 통일을 향한 이 시대의 최대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평화정착’과 동의어)이라 할 것이다.

노루가 반드시 노루목을 찾아 통과하듯 통일의 길도 반드시 평화의 노루목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이 평화의 노루목은 동족상잔의 잔재인 정전협정체제를 종식하고 공존공영의 새로운 평화협정체제를 확립함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평화 체제는 집짓기의 주춧돌과 같다. 반석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수 있는 법이다.

구라파의 냉전체제는 1990년 독일 통일과 공산권의 붕괴로 이미 끝이 났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난 54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의 존속으로 마지막 냉전지대의 화약고로 전쟁재발위험이 상존하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북핵 위기까지 겹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극도의 긴장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간의 북한관(악의 축, 깡패국가)과 ‘압살정책’ (북한의 주장)을 거두고 평화적 협상을 통한 전쟁종결과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미국의 결단은 남·북한에게 공치 정전체제와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기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의 창을 열어 준 셈이었다. 이 역사적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땀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 동안 많은 내외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정책 연구 보고서들을 내놓았다. 본 발제문은 공감이가 가는 주요 내용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북한의 적대관계 청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대장정의 도정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큰 산이라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냉전 종식의 열쇠는 워싱턴과 평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은 진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의 진전 여부는 사실상 정전협정의 지속이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나를 가능할 결정적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 관한한, 우리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접근법을 사용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원췌’로 불신하며, 압살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미국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현실 앞에 서 있는 셈이다. 미국의 확실한 생존권 보장 약속의 이행과 중국의 보장이 수반된다면, ‘김일성 유훈’까지 외면한 채 위험한 벼랑끝 전략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 최고 당국자의 결단 여부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한 채, 끝내 비확산 약속이행을 명분으로 어영부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 하려는 전술적 행동을 고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자초할 우를 범할 수 있다. 북한은 핵으로 안보를 보장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의 핵무장은 물론, 한국의 핵 주권론 자극으로 동북아에 핵 확산을 가져오고 급기야 북한의 고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필경 김정일 정권의 생존권마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시 정부의 과감한 대북 포용정책에로의 선회야 말로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라 할 만하다. 앞으로 핵 불능화 단계를 넘어서 기존 핵무기 철폐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검증과 신뢰조성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길은 수년이 걸릴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의 휴지화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실패를 교훈삼아, 협상주역을 자처하기보다는 미·북한의 빅딜 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는 이른바 Perry Process형 전략의 구상을 안출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

미·북한 적대관계의 청산 과정과 6자회담의 진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과도 직결되어 있다. 6자 회담에는 한국전쟁 직접 당사자들과 한반도 분단의 간접 당사자들(일·러)이 모두 참가하고 있고, 또한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미·북 관계 개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포럼’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6자 회담의 성패는 사실상 한반도 정전 체제와 냉전 종식의 진·퇴에 결정적 영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쌍무적·다무적 접촉과 협상을 전개하여 참가국들의 국가 이익에 유익한 공동 우승의 성과를 내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9·19 공동 성명](2005.9) 과 [2·13 합의](2007.2,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초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 정부가 특히 주력해야 할 몇 가지 중요 요소들이 눈에 띈다.

1) 검증가능한(verifiable) 한반도의 비핵화의 조기 달성과 행동대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공동 목표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무로 해석해야 한다)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할 직접 관련당사국들의 별도 포럼이 구성된다.(이는 앞으로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해체와 냉전 종식의 길을 평탄케 하는 정지 잡업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3) 5개의 실무그룹(W/G)중 한국이 의장국인 경제및 에너지 협력회의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제 2차 회의<금년 8월 7~8일, 판문점 남측평화의 집 개최> : 휴전이후 처음으로 JSA<공동 경비구역>에서 휴전협정 당사자들이 회동한다는 점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긴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4)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과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 보유 선언에 대해 당사국이 존중한다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2)의 이행과 200만 KW의 대북전력공급제안 확인을 명문화한 것과 연계시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대북 협상카드를 개발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포럼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무장관 회담의 성공적 개최후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쌍무적·다무적 정상회담의 개최방안도 긴밀한 국제 공조 체제를 통해 협의·추진할 수도 있다.

3. 종전선언의 추진방안 적극 검토

한국 전쟁을 공식으로 종식시킬 종전선언의 제안은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2006.11.18)에서 부시 대통령이 내놓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초기단계 및 다음 단계 조치를 이행 할 경우, 남·북한과 미국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서 명 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휴전후 미국 정부가 최초로 내놓은 제안으로써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8월 현재 범 정부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T/F 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휴전체제 (정전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선언을 골격으로 한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을 뿐([한겨레신문], 7.19자)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는 아직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주요 변수이지만, 3국 정상회담 이 실현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21세기 국제 정치의 대 사건으로 기록 될 만하다. 만일, 한·미간 사전협의하에 종전 선언문이 마련되고, 김위원장이 회동하게 된다면, 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 (PMZ= Peace-making Zone)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 할 경우, 사전 대비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상정될 수 있다.

첫째, 해상 분계선의 재설정 문제이다. 불가침 경계선으로 재설정 하는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 10조가 분명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 될 때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제 3차 장관급 회담이후 최근 제 6차 남북장성급 회담(7.24)에서도 지속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백지화와 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근본대책으로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평화체제 수립 당사자로서의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장차 평화협정 협상시 대비해야 할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엔군사령부의 존폐 문제이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시 까지 존속시키되, 전시 작통권 전환에 따라 조정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셋째, 남측의 국보법과 북측의 당규약, 형법등 적대적 법률의 폐지 문제이다.

이는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남북화해관련 부속 합의서 제4조에 의거 대응하면 될 것이다. (제4조: “남북기본 합의서에 저촉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 실무 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

4.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代替)

지난 4월 14일 미국의 Atlantic Council 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주제로 한 초당적 공동 연구 결과 보고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프레임 워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매우 주목 할 만 한 정책 건의서이다. 이 보고서는 북핵 폐기를 넘어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전 협정을 대체할 ‘4자 평화협정’ 체결이 2008 년 까지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정책입안 시 준거(Reference)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 4.14자)

첫째, 한국전쟁 당사자들의 평화협정체결방안이다. 미국과 중국의 안전 보장과 함께 UNSC가 추진결의를 채택하는 권고내용이 특기 할 만 하다.

또한 협정내용에는 한반도의 재통일이 궁극적 목표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평화협정이 현상유지(status quo) + 알파의 통일지향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독일통일(1990)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2+4 조약'(동·서독·미·영·불·소)의 선례를 참고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둘째,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 미국 3자 군사 협정 체결 방안이다. 이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잠정조치의 일환이다.

이제 우리 정부가 평화 협정 체결시 필히 반영해야 할 기본 고려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드시 통일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는 북한측도 같은 입장일 수 있다. '6·15 남북공동 선언' 제 2항과 과도 통일 기구라 할 수 있는 남북 연합의 제도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1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직접 관련 당사자인 미·중국의 협력과 보장을 받는 방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UNSC의 추진 결의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과 '6·15남북 공동선언'등 기존 합의서의 존중과 성실한 이행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전협정 폐기에 따르는 과거 청산 문제와 평화 보장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불가침 경계선, 무력 불사용 및 불 위협, 대량살상무기 불보유, 적절한 군사력 수준, 동맹군의 주둔문제, 평화감시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종전선언 이후에 체결될 평화 협정은 최선책으로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고 또 UNSC가 추진하는 이른바 '2+2+UN방식'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차선책으로서는 4자 평화협정 방안도 검토를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우리는 민족 통일을 향한 평화의 노루목으로 가는 길들을 더듬어 살펴왔다. 어느 하나가 짧고 평탄한 길이 없고, 멀고 험한 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혼자 급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반드시 길동무와 함께 살얼음 걸 듯 해야 통과 할 수 있는 길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도, 그리고 핵 문제 해결과 적대 관계 청산도 모두가 손뼉이 마주쳐야 가능한 것들이다.

후전선의 빙벽이 금이 가는 소리를 내고 있으나 하늘의 뜨거운 빛이 계속 내려 쬐이지 않으면 완전히 녹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햇볕주심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또한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써 헌신할 것을 재 다짐해야 한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네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전 보다 더욱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바란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최고 지도자들,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정죄 대신에 용서를,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김 위원장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시도록 기도하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평화의 기수로써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자.

둘째, 기존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의 확산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교회지도자들과 6자 회담 참가국 정부수뇌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셋째, 기존의 ‘민족화해 주간’(6·15-6·25)에 연이어 한국전쟁 발발 일부터 정전협정 조인일 까지를 ‘한반도 평화주간’(6·25-7·27)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내년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날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매년 함께 한반도 평화기원 집회(기도회, 학술회의, 평화대회, 문화예술행사등 특별프로그램기획)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연대운동의 한 축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초교파적 연합운동 방식뿐만 아니라 초종교적 평화 통일 촉진 특별 집회도 공동개최방식으로 검토해 보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평화·화해 의 사도로써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해 힘쓰고, 알리기에 힘쓰며, 땀 흘릴 때 주님은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들의 발걸음을 평화의 노루목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2007.08.10.